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윤석열 자신과 경찰의 우선순위였다.

2017년부터 2022년 '헬러윈데이 중합치안대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찰은 이태원역 주변 10곳을 지정해 '군중 분산 조치'를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을 각 지점에 배치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집중적으로 7곳이 지정됐고,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위쪽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됐다.

그러나 올해 헬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치가 전혀 없었다. 헬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은 압사 사고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기존의 안전 인력 배치 조처를 없앴고, 경찰은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마약사범 검거 기회로만 여겼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뒤집힌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였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경찰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마약 범죄와 흉악 범죄의 피해를 부각시켰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특히, 지지율 추락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선 경찰에 총기 지급 예산을 늘리고 총기 사용 강화를 지시했다.

정부 비판 집회 대응과 '마약과의 전쟁' 우선하느라 안전은 포기

윤석열은 참사 8일 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사 5일 전에도 윤석열은 국무총리에게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은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범죄 소탕에 대대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경찰력 강화와 서민층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부각시킨 것이다.

즉, 이태원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

려 한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참사 당일 경찰의 관심사가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적 시위일 뿐인 당일 집회 통제에 투입된 기동대의 수만 1100명에 달했다. 용산경찰서장은 9시 24분까지 집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장이 8시 32분 퇴근 전에 내린 마지막 지시도 집회 관련 격려였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말이다.

심지어 집회에 배치되지 않은 2개의 기동대 부대는 신고된 집회도 없는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배치됐다. 혹시 모를 사고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혹시 모를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는 철저히 대비했던 것이다.

11월 8일 윤석열은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말뿐인 사과로 통치고 자기 책임은 회피한 채 말이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여지없이 반복되는 진정한 책

임자들의 케케묵은 꼬리 자르기 수작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슬픔을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하며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핏대를 세운다.

항의 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몇 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초유의 정부다.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자와 기업주들 같은 특권층 봐주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이 그만큼 크고 광범한 것이다.

공권력의 지휘자 윤석열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책과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키워 그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또한 억울하게 희생된 156명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각료 해임 요구는 윤석열의 책임 전가에 이용될 수 있다

민주노총 등은 대통령 사과와 총리·장관 사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민중행동 등과 함께 11월 12일(토)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 추모 촛불”을 연다.

시민 추모 촛불 집회는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와 사실상 경쟁하는 집회를 개최해, 퇴진 운동과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자신은 남 일처럼 경찰·소방 지휘부를 질책하고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역대급 책임 전가를 하는 윤석열에게 각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의 책임 전가에 이용된다.

관례를 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터졌을 때 내각 일부가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다. 윤석열도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면 사과 요구에 양보하며 일부 각료를 경질할 수 있다.

이런 제스처를 통해 윤석열 반대 운동을 분열시키고 퇴로를 열려 할 것이다.

정권 심판론의 문제점 — 2008년 촛불의 교훈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지에서 “10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정권 심



판”은 선거 용어이다. 2008년 촛불의 기시감이 든다.

2008년 6월 10일 100만 명이 참가해 촛불이 정점에 이르자 많은 참가자들이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지도부 다수는 이명박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제도권으로 넘기자며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퇴진이 아니라) 심판론으로 투쟁의 열기가 식자, 7월 초에 이명박은 반격에 나섰다.

대책회의 활동가들은 수배를 당했고,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이 언론 탄압을 받았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았고, 노동자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사주한 인터넷 댓글 비방 공작에 시달렸다.

지연된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재개하려고 이명박이 권위주의적 수단들로 반격을 가한 것이다.

금융 공황이 터지자, 이명박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2009년 1월 용산 참사라는 비극적 살인 진압이 벌어진 것이다.

답답한 상황의 돌파구는 선거가 아니라 2011년 아랍 혁명과 세계적인 광장 점거 물결 속에서 한국의 거리 운동이 회복되면서 열렸다.

이런 돌아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도 이태원 참사 직전 다가오는 금융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떠넘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다.

2019년 조국 수호 촛불과 지금의 퇴진 촛불은 똑같은 게 아니다

노동운동과 대다수 좌파는 빠르게 바뀌는 정치·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격돌을 준비하며 투쟁을 대담하게 전진시키기보다는 주저하는 듯하다.

이런 점이公安세력과 검찰에 포착되지 않을 리 없다. 민주노총이 퇴진 요구와 거리를 두는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2월 투쟁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부른 정부 기조와 우선 순위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많은 좌파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총선 승리와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저지를 위한 열성 지지자들의 운동 정도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2019년 개혁 염원 배신으로 대중이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는 조국 수호 촛불과 달리 지금의 윤석열 퇴진 촛불은 윤석열 정부가(심각한 정치·경제 위기에 직면해) 우익 본색을 드러내며 제1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이다.

거의 같은 인사들이 주도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2019년에는 진보성이 없었고, 지금은 진보성이 있다. 집회 참가자들도 단순한 맹목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다.

당장 윤석열에 대한 정면 공격과 효과적인 반격에 나섰다.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11월 15일(화)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최근 한국 헌재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부기) 공저자

참가신청 bit.ly/1115-meeting

☎ 02-2271-2395, 010-4909-2025 (토) 11시
☎ 카카오톡: 오뚜기 오뚜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오프라인 포럼

거론되는 합사, 국가, 자본주의

2022년 11월 18일(수) 오후 7시
장소: 노원역 4차출구 (유대인구역 2번 출구 3분 가량) 3층 바실리코홀
발제 김문성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물다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저자

문의: 010-5443-2395
youth@workersolidarity.org
인스타&페이스북 DM 가능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